

# 포용복지와 소득정책의 방향<sup>1)</sup>



Inclusive Welfare and Income Policy

**김태완**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최준영**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이 글에서는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빈곤 및 양극화 현상을 분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소득보장제도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사회보험제도(국민연금 및 고용보험)의 사각지대 규모를 중심으로 한 대상자 포괄성 측면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빈곤, 소득 양극화 문제의 심각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노인빈곤과 소득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포용적·획기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노인층을 위해서는 일자리를 확대하고, 중고령층을 위해서는 노동 관련 법을 개정해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공 부문 일자리 확대, 임금과 복지의 차별이 없는 일자리를 통해 청년층 고용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 1. 들어가며

우리나라는 1990년대까지 빠른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지만, 1997~1998년 경제위기를 거치며 저성장과 커다란 사회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 1997~1998년 경제위기를 전후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 대표적으로 노동시장 유연화 조치로 인해 비정규직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또 재벌 개혁 실패, 신자유주의 및 주주자본주의 확대, 새로운 산업구조로의 전환 지체 등은 사회 전반적으로 양극화가 확대되는 원인이 되었다. 정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동시장(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1) 김태완, 김미곤, 여유진, 이태진, 김기태, 김현경,...심창학(2019), 포용복지와 사회정책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발간 예정) 보고서의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여 수정 및 보완한 것임을 밝힌다.

확대,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 등) 강화, 복지정책 확대(기초연금, 아동수당, 근로장려세제 등)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분배 수준은 경제위기 이전 상태로 회복하지 못한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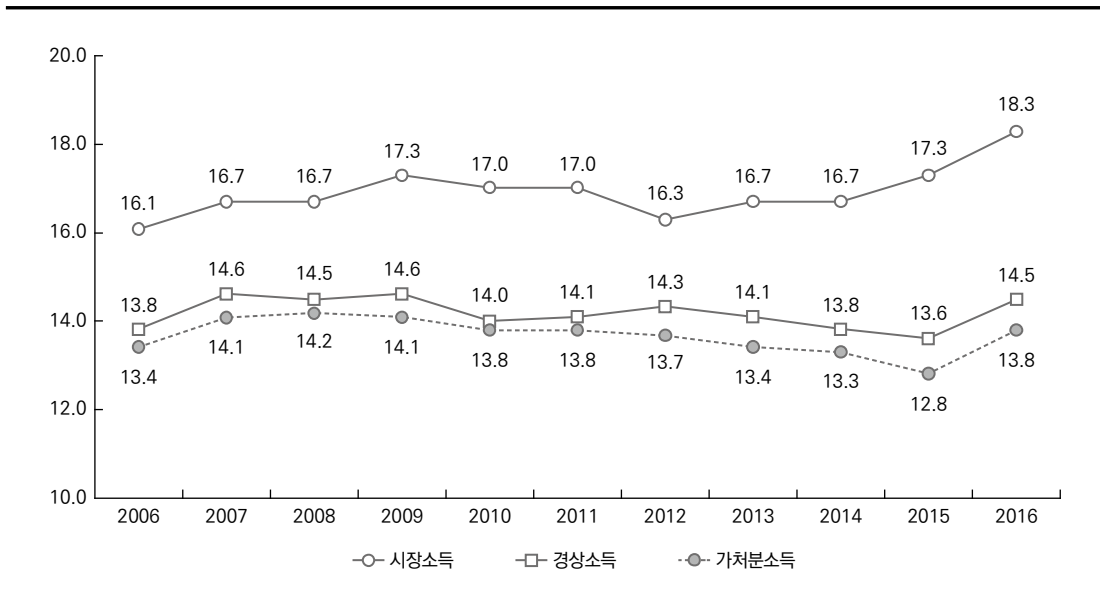
[그림 1]의 빈곤율 추이에서 알 수 있듯이 시간이 지날수록 빈곤율이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최근 들어 증가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정부의 위기 극복 정책이 충분히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2006년 16.1%였던 시장소득 기준 빈곤율은 10년이 지난 2016년 18.3%로 2.2%포인트 증가하였다. 가처분소득 기준으로도 같은 기간 13.4%에서 13.8%로 소폭 증가하였다. 그나마 긍정적인 효과는 공적이전소득 증가

에 따라 공적이전소득의 빈곤 감소율이 2006년 2.3%포인트(시장소득과 경상소득 차이)에서 2016년에는 3.8%포인트로 증가한 것이다. 하지만 시장소득 빈곤율 증가만큼 공적이전소득의 빈곤 감소폭이 크지 않아 저소득층의 상황은 크게 호전되고 있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빈곤 및 양극화 현상을 분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소득보장제도와 관련해서는 여러 제도가 있지만, 지면의 한계로 여기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사회보험제도(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소득보장제도의 분석 틀로는 사각지대 여

그림 1. 상대적 빈곤율 추이(중위 50% 기준)

(단위: %)



주: 농어가 제외, 1인 가구 포함.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연도: 김태완, 김기태, 정세정, 이주미. (2018). 소득분배 동향분석 및 정책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29 재인용.

부를 판정하는 대상자 포괄성, 급여 대상자의 생활 수준을 적정하게 보장하는지를 평가하는 급여 적정성, 개별 소득보장제도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효과성 및 효율성 평가 등 여러 평가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사각지대 규모와 문제를 중심으로 한 대상자 포괄성 측면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최근에 많이 나타나고 회자되고 있는 고령화, 복지 사각지대 등에 대한 현황 분석과 평가를 통해 정부가 지향해야 할 소득보장정책의 생애주기적 정책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 2. 최근 소득분배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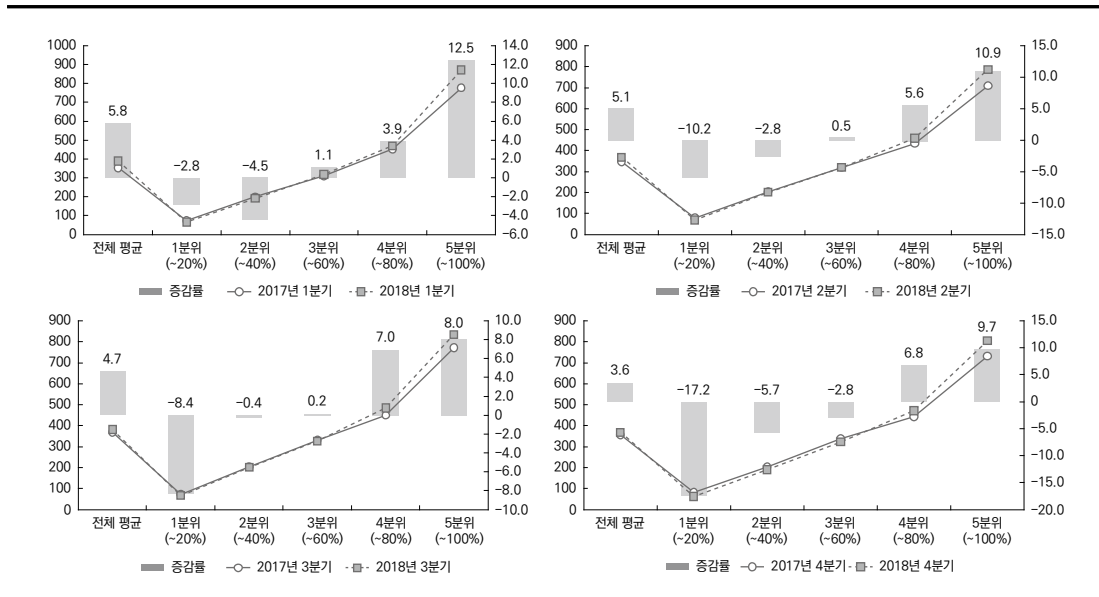
사회적으로 취약한 저소득층의 생활이 크게

영향을 받은 결과는 2018년 통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18년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분기 자료를 보면, 조사 대상 전체적으로는 평균 소득이 늘어났지만 계층별로는 차이가 있었다. 소득이 낮은 하위 1분위 계층은 연간 계속해서 소득이 음의 성장을 보인 반면, 소득이 높은 5분위 계층은 계속해서 양의 성장을 해, 소득분배(5분위 배율)가 악화되고 저소득층의 생활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가계동향조사에 대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계층의 소득 상황이 가장 악화되었고 다음으로 50~64세 중고령층의 소득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김태완, 김기태, 정세정, 이주미, 2018).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소득보장에서의 위기계

그림 2. 전 가구 분위별 경상소득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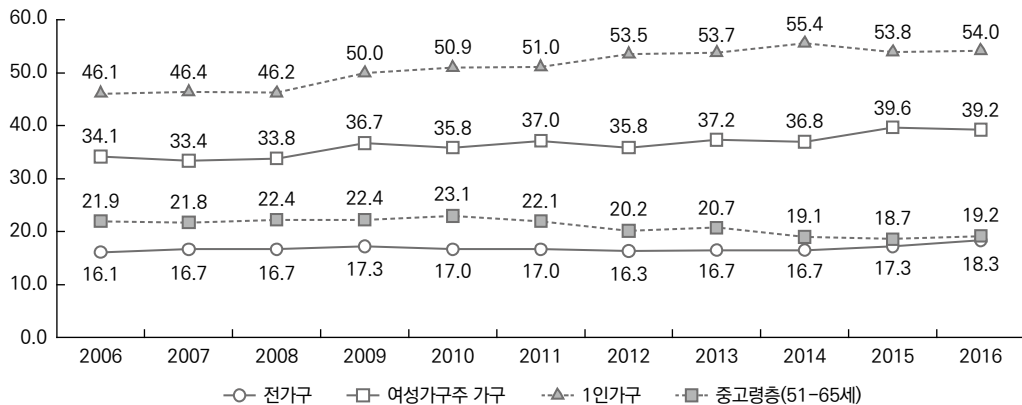
(단위: 만 원/월평균 소득, %)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분기 자료), 각 분기.

그림 3. 새로운 빈곤층: 여성, 1인 가구, 중고령층

(단위: %)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연도(중위 시장소득 50%, 1인 가구 포함); 여유진, 전지현. (2017). 빈곤통계연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 51, 83, 126 재인용.

층은 노인, 중고령층만의 문제는 아니다. 여성 가구주 가구(한부모 가구 포함)도 빈곤율이 30~40% 대로 높다(그림 3). 새롭게 대두된 계층으로는 1인 가구를 들 수 있다. 핵가족화가 심화하고 가구원 수가 줄어들면서 점차 우리 사회 가구 형태에서도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다. [그림 3]의 빈곤율에서도 1인 가구의 빈곤율이 높게 유지되는 것을 볼 수 있다. 1인 가구에는 특히 노인과 청년층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데, 청년은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시점에 빈곤을 경험할 경우 미래의 불안정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한 계층이다. 노인 독거 가구의 빈곤율이 다른 가구에 비해 높은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저소득층의 특성은 어떠한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 조사를 활용하여 소득 하위 1분위의 특성을 알아보고 소득 하위 1분위 중 일 을 해도 빈곤한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소득 하위 1분위 계층의 특성을 동태적으로 보면,<sup>2)</sup> 2014~2017년 사이에 분위를 기준으로 4년간 계속해서 1분위에 머 무르고 있는 경우는 44.7%, 4년간 1분위를 반복 적으로 경험했거나 2017년에 1분위로 하락한 비율은 39.8%, 분위가 상승한 경우는 15.6%이 다. 소득 하위 1분위에서 벗어나기보다는 지속적 으로 남아 있거나 반복과 하락이 주기적으로 발 생하는 것이다.

2) 기초 분석 틀은 균등화 가처분소득(가구소득을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나눔) 기준으로 5분위로 세분하였으며, 최근 시점인 2014~2017년 4개년을 기초로 소득 하위 1분위 가구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표 1. 패널 동태 기준 분위 변화(개인 기준, 2014~2017년)

(단위: %, 세)

구분		1분위 지속	1분위 반복 및 하락	1분위 반복	1분위 부분 (분위 하락)	분위 상승
전체		44.7	39.8	13.8	26.0	15.6
연령	34세 이하	10.8	24.9	18.0	28.8	30.4
	35~49세	12.1	17.6	13.3	20.0	23.7
	50~64세	22.8	28.5	28.4	28.5	24.3
	65세 이상	54.3	29.0	40.3	22.7	21.6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연령		60.8	46.9	52.1	44.1	44.0

주: 1) 1분위 지속(4년 중 4회 1분위)은 2014~2017년 4년 내내 빈곤한 경우를 말하고, 1분위 반복(2017년 1분위를 포함하여 4년 중 3회 1분위), 1분위 부분(2017년 1분위를 포함하여 4년 중 1~2회 1분위), 분위 상승은 2014~2016년 중 2~3회 1분위에 머무르다가 2017년에 1분위를 벗어난 경우를 말함.

2) 개인 특성은 2017년을 기준으로 함.

자료: 한국복지패널 원자료. 각 연도: 김태완, 김미곤, 여유진, 이태진, 김기태, 김현경, ... 심창학. (2019). 포용복지와 사회정책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발간 예정) 보고서 재인용.

표 2. 정규직, 비정규직 여부(개인 기준, 2014~2017년)

(단위: %)

구분		1분위 지속	1분위 반복 및 하락	1분위 반복	1분위 부분 (분위 하락)	분위 상승
비율		44.7	39.8	13.8	26.0	15.6
정규직		10.5	32.0	24.5	35.6	34.6
비정규직		89.6	68.0	75.5	64.5	65.4
정규직	34세 이하	17.1	28.5	38.0	25.4	47.7
	35~49세	31.1	36.6	44.7	34.0	25.7
	50~64세	47.3	33.4	17.3	38.6	24.8
	65세 이상	4.5	1.5	-	2.0	1.8
비정규직	34세 이하	8.3	13.4	12.2	14.1	29.2
	35~49세	13.3	23.4	22.2	24.1	31.9
	50~64세	37.3	42.7	36.9	45.8	26.0
	65세 이상	41.1	20.5	28.7	16.0	12.9

주: 개인 특성은 2017년을 기준으로 함.

자료: 한국복지패널 원자료. 각 연도: 김태완, 김미곤, 여유진, 이태진, 김기태, 김현경, ... 심창학. (2019). 포용복지와 사회정책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발간 예정) 보고서 재인용.

연령별로 보면, 1분위에 지속적으로 남아 있는 경우는 65세 이상이 54.3%로 가장 많았고 뒤 이어 50~64세가 22.8%로 분석되었다. 즉 1분위에 4년 내내 남아 있는 집단 중 50세 이상의 비율은 77.1%로, 절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점하

고 있다. 가계동향조사 횡단면 분석에서 밝혀진 것과 같이 65세 이상 노인과 중고령층이 현재 우리 사회에서 소득 기준으로 가장 취약한 대상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김태완 외, 2018).

2000년대 이후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은 비정

규직을 증가시켰고, 일을 해도 소득 개선이 어려운 여건을 만들어 내고 있다. 1분위에 지속해서 남아 있는 경우 90% 가까이가 비정규직 형태로 일을 하고 있으며 정규직은 10.5%에 불과하다. 1분위를 반복 및 하락하는 경우에도 비정규직이 68.0%로 높았다. 비정규직은 연령이 높을수록 1분위에 계속 남아 있거나 1분위를 반복적으로 오르내리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로 고령층의 비정규직 비율이 높았다. 분위 상승은 주로 청년층과 중년층에서 이뤄지고 있다.

### 3. 소득보장정책 진단 및 평가

우리나라 소득보장제도를 단계별로 살펴보면, 가장 낮은 층에는 빈곤과 실업, 고령 등을 종합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있다. 두 번째 층으로는 노동시장에서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고 실업, 고령 등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고용보험, 근로장려금, 국민연금 등의 공적연금제도를 들 수 있다. 세 번째로는 개인 스스로가 사회적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한 각종 보험 및 저축(연금 포함) 등을 들 수 있

다. 소득과 관련된 사회적 위험이 발생할 때 개인과 가구가 안전하게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설명한 세 가지 층이 촘촘하고 안정적으로 구성되어 있어야만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 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최저층에서 각종 사회적 위험에 대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충분히 보호를 하고 있는지를 보면, [그림 4]와 같이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사회적 위험에 충분히 대응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경기변동에 따라 경기 수축 국면에는 실업자와 빈곤층이 증가한다는 점에서 수급률이 증가하고 경기 상승 국면에는 반대의 현상이 나타나야 하는데, [그림 4]를 보면 빈곤율이 증가해도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률은 제자리걸음이다. 즉 사회복지제도의 주요 기능 중 하나인 자동안정 장치가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이 높다는 점은 많이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그림 5]에서도 노인빈곤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6년 52.3%(시장소득)에서 2016년 65.5%까지 증가했지만, 기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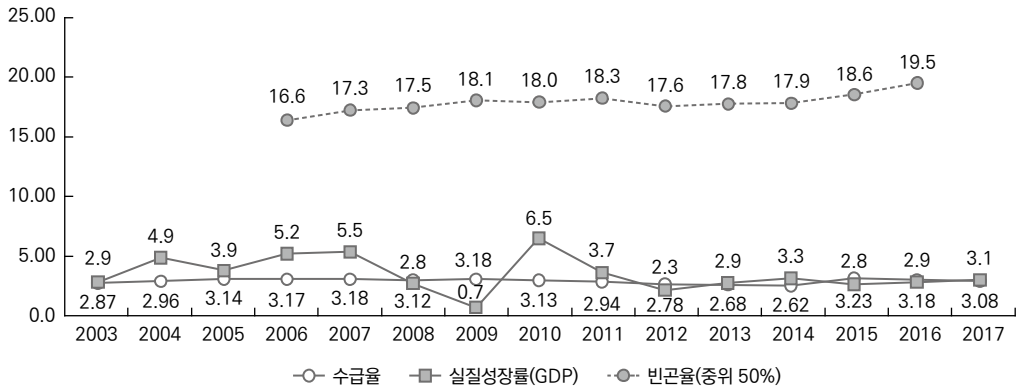
표 3. 우리나라 소득보장체계

구분	사회적 위험				
	빈곤	고령	실업(폐업)	상해	기타(재난, 재해 등)
3층	개인소득, 저축				
2층	근로장려금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고용보험	(상병수당×)	-
	기초연금				
1층(최저층)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				

주: 질병과 질환에 대한 보장은 의료보장이라는 새로운 축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여기서는 소득보장을 중심으로 분석함.

그림 4. 빈곤율, 경제성장률과 기초생활보장 수급률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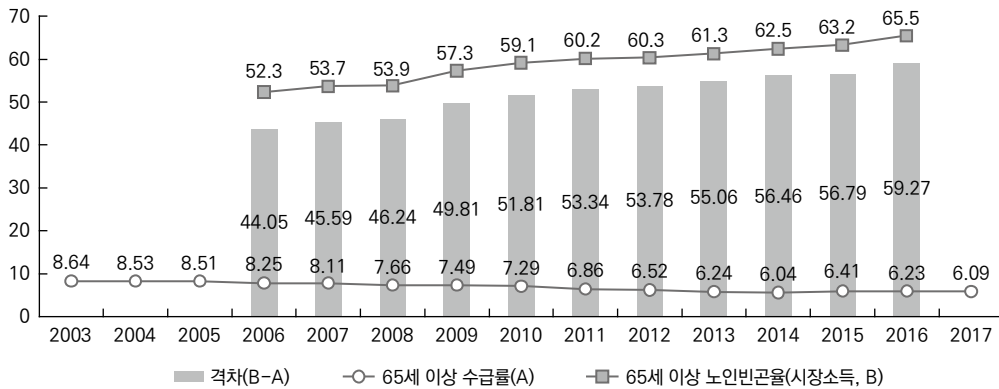
(단위: %)



자료: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통계. 각 연도: 통계청, 실질성장률, 상대빈곤율(중위 시장소득 50%, 1인 가구 및 농어가 포함). KOSIS 홈페이지; 김태완. (2019). 저소득층 빈곤동향과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방안. 포용복지포럼 4차 기초생활보장법 제정 20주년 기념 심포지엄 자료집. p. 45 재인용.

그림 5. 노인빈곤율(시장소득 기준, 중위 50%)과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노인 수급률

(단위: %)



자료: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통계. 각 연도: 통계청, 상대빈곤율(중위 시장소득 50%, 1인 가구 및 농어가 포함). KOSIS 홈페이지; 김태완. (2019). 저소득층 빈곤동향과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방안. 포용복지포럼 4차 기초생활보장법 제정 20주년 기념 심포지엄 자료집. p. 46 재인용.

생활보장제도의 노인 수급률은 오히려 2003년 8.64%에서 2017년 6.09%까지 줄었다.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실과는 괴리가 있는 것이다.

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제도  
소득보장체계 1층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야 할 공적연금(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현실은 어떤가. 대표적인 노후소득보장제도인 국민연금을 보면, [그림 6]과 같이 여전히 385만여 명의 국민이 납부예외로 남아 있으며, 약 100만 명이 장기 체납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결국 이들 납부예외자와 특히 장기 체납자의 상태가 계속 유지될 경우 장기적으로 65세 이후에 빈곤을 경험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점에서 이들 대상을 축소하기 위한 방안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sup>3)</sup>

고용보험은 실업자를 충분히 보호하고 있을까. 2018년 12월 말 기준으로 실업자는 94만 4000명(통계청, KOSIS)이었다.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

를 받은 규모는 2018년 12월 말 기준으로 약 38만 2000명(한국고용정보원, 2019)으로, 직관적으로 볼 때 실업자의 40.5%에 불과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69.7%와 비교하면 30%포인트 가까이 차이 난다(오연서, 2019). 이와 같이 실업급여를 받는 노동자가 OECD 국가에 비해 적은 이유 중 대표적인 것이 고용보험 제도에 대한 가입률이 높지 않다는 점이다.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 디지털화, 전산화의 발전으로 플랫폼 경제, 클라우드 노동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이 출현하고 있다. 하지만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사회보험 방식에서는 이들을

그림 6. 공적연금 가입 실태

18~59세 총인구 32,632천 명 (100.0%)					
경제활동인구 23,338천 명					
공적연금 적용자 23,099천 명					
비경제활동 인구 9,293천 명	공적연금 비적용자 239천 명	국민연금 적용대상 21,479천 명			특수직역 연금 1,620천 명
		소득신고자 17,627천 명			
		납부예외자 3,852천 명	장기체납자 1,036천 명	보험료 납부자 16,591천 명	
		28.48%	0.73%	11.81%	
소 계 14,421천 명(44.19%)			소 계 18,211천 명(55.81%)		

자료: 국민연금공단. (2017). 2017 국민연금 생생통계. p. 21 재인용.

3) 국민연금제도의 태생적 한계로 인한 노후소득보장제도의 문제를 지적할 수도 있다. 여유진(2019)의 연구에서는 노인빈곤의 원인으로 국민연금제도의 적립 방식 운영(성숙 단계까지 노후소득보장 미비), 공적연금 사각지대 문제, 노동시장 불안정성으로 인한 충분한 가입 기간 및 보장성 확보 미비,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은 점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받아들이고 보호할 수 있는 체계가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고 있으며, 가까운 미래에 소득보장 사각지대 문제를 더욱 확대시키는 문제가 될 수 있다.<sup>4)</sup>

#### 4. 나가며

지금까지 우리나라 소득보장제도의 문제와 한계를 살펴보았다. 우리 사회가 직면한 빈곤과 양극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일까. 모든 사람, 모든 계층이 만족할 만한 소득보장제도를 구축하기는 쉽지 않다. 여기서는 당면한 소득보장의 사각지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생애주기별로 제안해 보고자 한다.

먼저, 현세대 노인의 빈곤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다. 정부도 노인빈곤율을 줄이기 위해 경로연금 → 기초노령연금 → 기초연금으로 급여 수준을 조정하며 노력했지만, 효과는 크게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노인빈곤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장기간 빈곤 상태에 있는 노인 계층을 보호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획기적으로 개편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된 이후 여러 차례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었지만 효과는 미미한 상황이다. 정부는 2020년부터 중증 장애인에 한해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예정이다. 추가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계획하고 있다

면 노인에 대해 먼저 폐지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노인만을 대상으로 폐지를 고려할 수 있는 이유는 점차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 수급자가 증가하고 급여액이 늘어나면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노인 수급자가 늘어나는 것을 일정 부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노인 가구의 경우 자산 구성에서 부동산의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재산 기준 등을 조정해 노인층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진입을 일부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노인을 대상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될 경우,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과의 관계 설정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자칫하면 연금을 계속 납부하지 않고 65세 이후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를 받고자 하는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간의 관계를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검토되어야 한다.

노인의 소득보장을 위해서는 계속해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만들어져야 한다. 일차적으로 시장 내에서 일자리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현재 정년제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현실화되는 시점에서 생산가능인구의 유지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노령층의 기술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시장에서 그동안 축적되어 온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정년을 연장하거나 계속 고용하는 등 노인들이 원하거나 필요로 할 때

4) 최근 플랫폼 경제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플랫폼 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고용보험 34.4%, 국민연금 52.6%, 건강보험 70.1%로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었다(최기성, 2019, p. 43 재인용).

일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어야 한다. 비숙련 기술자나 취약한 노인에게는 정부가 제공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를 확대해 일정한 근로소득이 발생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 같은 조치는 결국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모든 노인빈곤 문제를 다 떠맡게 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다음으로 중고령층에 대한 소득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 1997~1998년 경제위기 이후 50대 초반에 조기 퇴직, 정리해고, 은퇴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50대 초반의 조기 퇴직은 결국 자영업 종사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준비되지 않은 자영업은 쉽게 실패하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중고령층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노동시장 관련 법을 엄정하게 시행하여 과도하게 정리해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주당 근로시간을 조정해 일자리를 서로 나누는 방안 등이 시행되어야 한다. 단기적으로 민간 기업에서의 일자리 나눔이 어렵다면 공공기관 등의 인력 채용을 증가하는 방향으로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공공 부문 일자리 규모는 OECD 국가 평균인 18.1%(2015년 기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7.7%(2017년 기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통계청, 2019).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일자리가 아닌 지속적이고 일자리 차별이 없는 공공형 일자리가 중고령층과 기타 취약계층(특히 청년층)을 위해 제공되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숙련된 기술을 갖지 못한 중고령층을 대상으로는 정부가 재정 지원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노동시장에서 소득 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노인과 중고령층을 포함한 전 계층을 대상으로 급여 수준을 보장하고 지출(=보험료)에 대한 지원을 함으로써 소득보장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제도적 측면에서는 국민연금이 재정 안정성 강화로 인해 소득대체율이 감소하고 있으며, 실질적 노후소득보장 역할을 못 하고 있다. 현재 감소하고 있는 소득대체율을 45% 수준으로 조정해 되, 연금보험료를 조정해 기금이 급격히 줄어드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보험료 조정 시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의 부담이 동시에 증가할 수 있으므로, 경영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기업에 대해서는 두루누리 사업 등의 확대를 통해 일부 보험료를 지원하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고용보험도 적극적으로 대상자를 확대(특수고용노동자, 비정규직 등)해 사각지대를 줄이고 실업과 폐업 등으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만들어져야 한다.

청년들은 취업을 할 때 임금, 복지, 기업의 사회적 명망 등과 같은 환경을 중요시한다. 따라서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의 청년 취업을 늘리기 위해서는 기업 규모별 임금과 복지에 대한 차별이 없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모든 지원을 기업이 부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에서 기업복지 외에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 혜택이 중소기업 노동자에게 확대(어린이 돌봄, 배우자 취업 지원, 주거 지원 등)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이 확충되어야 한다. ■

---

**참고문헌**

- 국민연금공단. (2017). 2017 국민연금 생생통계.
- 김태완, 김기태, 정세정, 이주미. (2018). 소득분배 동향분석 및 정책방안 연구. 세종: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태완. (2019). 저소득층 빈곤동향과 기초생활 보장제도 개선방안. 포용복지포럼 4차 기초생활보장법 제정 20주년 기념 심포지엄.
- 김태완, 김미곤, 여유진, 이태진, 김기태, 김현경, ...심창학. (2019). 포용복지와 사회정책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간 예정 보고서.
- 여유진. (2019). 한국의 노인빈곤과 노후소득보장. 이슈애포커스 364호, 1-8.
- 여유진, 전지현. (2017). 빈곤통계연보.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오연서. (2019. 3. 14.). 갑질로 그만둔 자발적 퇴사자는 실업급여의 사각지대에 방치된다. 한겨레신문.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85858.html](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85858.html) 에서 2019. 5. 11. 인출.
- 최기성. (2019). 플랫폼 경제종사자 주요 직종의 근로실태. 플랫폼경제종사자 고용 및 근로실태 진단과 개선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한국고용정보원.
- 통계청. e-나라지표. 경제활동인구조사.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A7086S&vw\\_cd=MT\\_ZTITLE&list\\_id=B16&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A7086S&vw_cd=MT_ZTITLE&list_id=B16&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 에서 2019. 5. 11. 인출.
- 통계청. (2019. 2. 19.). 공공부문 일자리통계. 보도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2018년 12월 고용보험통계. 2019. 5. 11. 인출.